

데스크 시각

전통 민속문화 맥이 끊긴다



송기동 문화2부장

“이 나무를 찾으려고 이 산 저 산 돌고 돌아/ 어렵사리 찾았구나/ 이 나무를 집 대나무로 베어서/ 촌전(村前) 앞으로 모셔가세...”

지난 26일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2구 옷가무래마을. 동네 주민들이 집대 만들기에 한창이었다. 먼저 오전 일찍 마을 인근 대평리 골짜기에서 8m 정도 길이의 육송(陸松)을 잘라 오면서 시작됐다.

ㄴ자 모양으로 생긴 '깎댓'으로 소나무 꺾짐을 벗기는 사이 Y자 나무와 ㄱ자 나무를 조합해 오리 몸통과 머리를 만드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됐다. 주민들은 '솨대' 대신 '집대'라고 부른다. 오리(새)를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신자로 보는 북방 사머니즘의 흔적이다.

오리 입에는 잘게 쪼갠 대나무 서너 가지를 물렸다. 주민들은 '오리 수업'이라고 부른다. 이는 마을의 화기(火氣)를 물

고 날아가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집대를 세울 구멍이에는 북어를 넣었다. 육송 끝에 한지를 끼워 오리를 맞춘 후 세 방향에서 맞출을 연결했다.

동네 주부들까지 모두 나와 힘껏 줄을 당겼다. 마침내 기존 집대 옆에 다소 키 낮은 새로운 집대가 세워졌다. 밀동 손잡이를 돌려 오리 머리를 남쪽 방향 솨대봉(일명 등산술)으로 향하게 했다. 집대 앞에 막걸리 잔과 나물 한 접시로 간단한 제상을 차리고 나니 풍물이 울려 퍼졌다.

200년 이어 온 집대 세우기

가수리 마을 주민들은 매년 음력 2월 1일마다 마을 어귀 당산나무 앞에 집대를 1개씩 세우기 시작했다. 마을이 형성된 1800년 대부터 집대를 세웠다. 김장수(65) 이장은 집대제(祭)를 지내는 까닭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마을 앞에 있는 산이 화기를 품고 있어 빈번하게 마을에 화재가 발생한다고 했다. 병아리를 키우는 대바구니 ‘엇가리’(덕가래)에 불이 붙어 굴러다니면서 마을이 전소한 적도 있다고 들었다. 마을에 재앙이 없고, 자신들도 사고가 없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집대제를 모신다.”

하지만 20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가수

마을 집대 세우기 명맥이 끊어질 위기를 맞고 있다. 농촌 공동화와 주민들의 고령화로 매년 집대 세우기가 어려워진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집대제를 지내지 못했다. 주민들은 17가구 30여 명으로, 50~90대 노인들뿐이다. 이날 나무를 베어 오고 깎는 작업에는 남자 10여 명이, 집대에 줄을 묶어세우는 작업에는 여자 10여 명까지 참여했다. 집대제를 마치고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함께 모여 뒤풀이 점심을 했다.

행정적 관심과 지원 절실

이날 나무 자르기에서 세우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2시간 정도. 예전에는 육송을 옮길 새끼줄을 꼬고, 나무를 베고, 옮기고, 집대를 세울 때 풍물패가 앞장섰다. 또한 고유의 노동요(勞動謠)를 불렀다. 그때는 집대를 세우려면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간소하게 치른 지가 꽤 오래됐다. 올해 역시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경운기

뒤에 나무를 매달아 마을로 끌고 왔다.

가수리 상가마을 집대 세우기는 지난 2003년 12월에 ‘화순군 향토문화유산’(제17호)으로 지정됐다. 실제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집대를 세우는 곳은 전국적으로도 드물다. 관광지 같은 곳에 세워진 ‘짜쯔’ 솨대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전통에서 전래된 민속문화는 아예 사라지고 만다. 길이 후대에 전승되어야 할 민속문화의 명맥이 끊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을 어르신들이 주도하되, 문화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동참하는 축제 같은 집대제도 생각해 볼 만하다. 200여 년간 명맥을 이어 온 마을공동체와 가수리 집대제를 살리기 위한 묘안은 없을까.

“우리 마을 집대님은 화재 예방해 주시고/ 우리 마을 집대님은 질병 예방해 주시고/ 우리 마을 집대님은 풍년 농사 기원하네.” /song@kwangju.co.kr

은펜클럽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

의료광고,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 후 1973년 개정된 의료법은 종전대로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과대광고는 금지하였지만 일부 범위의 의료광고를 허용하여 의료인의 이름, 면허종류,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일, 진료시간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광고를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의료법에서는 “누구든지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특정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이와 같은 제한 규정에 대해 ‘의료인에게도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있었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 규정이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문화했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는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 한 뒤 지금의 의료광고는 ‘전면적인 허용

상태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싱가포르의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한다. 행정부 ‘사건 허가’ 없이 모든 현수막 광고, 대중매체 광고를 할 수 없다. 의학잡지와 전화번호부 광고만 허용된다. 언론과 인터뷰도 의료기관을 선전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형식과 내용도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미국의 의료광고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규정이 없다. 70년대 의사단체가 승수하면서 의료 광고가 전면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80년대 급격한 의료비 상승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의료시장에서의 경쟁을 유도하고, 의료수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의료광고가 전면 허용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지만 의료광고는 거의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의료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의 광고와 달리 그 실질적 내용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같은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선택이 국민건강에 좋지 않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

는 법적 장치도 미비하다. 이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믿음’으로 포장되어 일반 의료광고보다 소비자의 판단을 더욱 어렵게 한다. 그 피해도 격증된다. 대안으로 시행 중인 ‘의료기관 인증’도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시설에 치우치는 측면이 있어 의료기관 선택의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실제로 광고가 병원경영에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따져보지도 못한 채 다른 병원이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다.

의료광고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하겠지만 없어진 법적 규제를 다시 만드는 것은 민주적 절차와 제도의 긍정적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다. 의료의 공공성과 윤리적인 면을 고려한 언론기관, 광고회사, 광고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광고는 항상 과거와 미래의 모습만 이야기한다. 치료 전후 상황 중 좋은 것만 비교해서 보여준다. 정작 중요한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다. 잘못된 광고는 현재 진행형인 치료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숨기고 미래에 대한 아련한 환상만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혜택 확대된 기초연금 적극 활용하세요



노대우 국민연금광주지역본부장

되도록 설정한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이다. 우선 2017년도 기준 선정기준액을 보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단독가구는 종전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종전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크게 인상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부부가구 160만원 초과 190만 4000원 이하) 소득구간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소득산정 세분기준에서는 근로소득별 위의 기본공제액이 월 56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소득만 있다면 단독가구의 경우 종전 198만 8000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됐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284만5000원에서 332만원으로, 맞벌이는 340만 5000원에서 392만원으로 종전보다 51만 5000원이 상향됐다. 이는 기본공제액과 선정기준액이 모

두 인상되어 근로활동 중인 어르신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된 것이다. 일반 주택만 있을 경우 대도시 부부가구의 경우 종전 6억 1500만원에서 7억 620만원으로 변경되어 최대 9120만원이 상향됐다.

현재 기초연금액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1인 수급가구의 경우 최저 2만원에서 최대 20만4010원을, 2인 수급가구의 경우 최저 4만원에서 최대 32만6400원(수급자 각각 20% 감액)을 수령한다. 이는 2017년 4월부터 불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황 조정될 예정이다.

올 한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선정기준액 상황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큰 어르신들에게 집중 안내하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신청을 활성화하여 기초연금 수급률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공단에서는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편, 기초연금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알려 주면 공단지원이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일명 ‘찾아보는 서비스’라 불리는 제도로, 특히 격오지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활용할 경우 매우 유익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올해로 만 9년이 되었다. 연금공단과 정부는 보다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를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어르신들의 편의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아쉬움 속 막 내린 특검 수사 90일간의 여정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끌어 온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90일간의 수사 여정이 아쉬움 속에 어제 막을 내렸다. ‘역대 최대 규모’ ‘역대 최대 구속·기소’ 등의 기록을 세운 특검은 기소한 피의자들의 죄를 재판에서 입증해야 하는 숙제를 남겨두었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만은 확실하다.

특검이 90일 동안의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긴 인원만 13명, 공식적으로 불러 조사한 인원만 60여 명에 이른다. 특검은 역대 최대인 25명기량을 기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검이 재판에 넘긴 이들은 하나같이 쉽지 않은 상대였다. 당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당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당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당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이제 특검 수사는 끝났지만 공소 유

의 중요성을 과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법무부와 파견 검사 규모를 조율 중인 데 특검법은 수사 완료 후 공소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은 7개월 만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은 공소 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5월 말이면 특검이 수사한 사건들의 1심 결과가 대부분 나올 예정이다.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는 검찰에 넘기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삼성의 대기업, 이화여대 학사비리 관련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등 아직도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적폐 청산의 임무를 이어받은 검찰은 민심을 바탕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초등생 지필고사 폐지 창의인재 육성 계기로

광주시교육청은 고등학생 신입생의 반 편성 배치고사 전면 금지와 보충수업 폐지에 이어 초등학교 학생들의 지필고사도 금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광주 지역 모든 초등학교가 일제시 지필평가(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기로 했는데 지난 2014년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폐지했던 중간·기말고사를 올해 전 학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교육청은 지난해 3~6학년의 경우 중간·기말고사 실시 여부를 각 학교 자율에 맡긴 결과, 폐지에 대한 호응이 커 올해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했다고 한다.

교육청은 그러나 지필고사 폐지를 보완하기 위해 수업 시간에 평가를 실시하는 원칙을 세웠다. 평가 방법은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서술하거나 논술, 구술, 토론, 포트폴리오, 보고서, 관찰, 사회적 실천 등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침이다. 초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지침도 시험을 통한 학생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의 성장을 평가하는 것으로 바꿨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지필고사 폐지는 새로운 정책은 아니다. 지난해 세종시와 전남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등 지역 교육청들이 이미 지필고사를 금지했다. 전라북도도 ‘초등 성장평가제’를 전면 시행해 기존의 일제고사 지필평가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초등학교 학생들의 지필고사 폐지는 최신 교육의 흐름과 맥락을 함께 하는 대세로 광주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환영받을 만하다. 하지만 당장 교사 간 수업방식·전문성의 차이를 인한 학생 평가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교사 전문성 확보 문제 등 과제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시행했던 다른 지역 교육청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확산해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태극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사랑은 유별났다. 일제 치하 독립운동과 6·25 전쟁이라는 굴곡진 현대사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애국심의 표현이 태극기로 모인 결과였다.

50년 이상 장년층은 1970~80년대 저녁 무렵 거리에서 국가하강식이 열리면 걷다가도 멈춰 한 손을 가슴에 얹었던 기억이 생생할 것이다. 몇 년 전 공전의 히트를 쳤던 영화 ‘국제시장’에서 말다툼을 하던 주인공 부부가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부리나케 일어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던 장면은 우습기보다 비장감마저 들게 했다.

경외심의 대상이던 태극기를 친숙하게 이용하게 된 것은 2002년 한일월드컵 때부터일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인들이 성조기를 몸에 두르거나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 착용하고 다녔던 모습이 우리에겐 낯선 풍경이었다. 하지만 당시 핫한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응원하던 여성이 스타로 떠오르면서 태극기는 친숙하게 우리 곁에 다가왔다.

한때 원일인가. 요즘엔 태극기가 특정 집단의 집회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보수단체들이 촛불 집회의 맞불 집회 형식으로 태극기를 들고 탄핵 반

대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보수 성향의 사람들을 결집하는 도구로 활용되다 보니 이렇다거 태극기가 국문 분열의 아이콘이 되는 것은 어찌나 걱정된다.

지난 26일 청주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를 지켜보던 20대가 태극기를 불태워 경찰이 국기모독죄 적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이 청년은 “태극기를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용하라고 만든 것이 아닌데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돼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옛그제 광복회 광주 전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시위에 태극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화합과 단결을 상징하는 태극기의 정신을 무시하고 국민 분열을 초래하는 데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오늘 98주년 3·1절에도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광화문광장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처음으로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을 계획하고 있어 두 집단 간 충돌이 우려되기도 한다.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을 외치던 선열들이 3·1절 태극기 집회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개탄하는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details.